

지방자치·종합

여야 “재외국민 표심을 잡아라”

올 대선 박빙… 20만~30만명 투표 예상
당소속 의원들 외국 보내 교민 공략 분주

여야가 올해 대선부터 처음 도입되는 재외 국민투표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11 총선 때는 5만6000여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나섰지만 정치적 비중이 높은 대선에서는 최소한 15만~20만명, 많게는 20만~3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박빙의 대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재외국민들의 표심은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 소속 의원들을 세계 각지에 보내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투표에서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에서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들이 나이가 많고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재외국민투표의 투표율을 제고에 적극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유철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은 중심으로 활진해, 심윤호, 정희수, 주호영 의원 등 각 지역 위원장들이 이달 아외국민에 나서며 재외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7월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중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 등을 시시로 돌며 교민들과 만나 왔으며 이달

말까지 일본과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영주권자들이 우편으로 신청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영주권자 주민록증 발급, 외국 시민권자 복수국적 연령확대, 유학생 학자금 지원 등 ‘맞춤형 동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도 재외국민투표가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동안 당 차원에서 재외국민과 충실히 소통해 왔고 유학생과 해외출장자 등 단기체류자들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거급급 인사를 외국으로 보내는 등 교민들의 표심을 공략하는데 한창이다.

당장,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7월

중순부터 미주지역 10여군데를 돌며 교민들과 만났으며 상하이를 비롯, 칭다오, 베이징, 다롄 등 중국의 주요 거점을 돌며 교민, 유학생, 해외출장자 등을 만나고 있다. 한 전 총리 외에도 김성곤 당 세계한인민주회 수석 부의장과 신경민 의원이 동남아를 돌며 재외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 의원은 또 지역별로 투표율 제고 캠페인 차원에서 꾸려진 대선참여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외국민 투표도 국내의 대선 판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재외국민 투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주자에 대한 지지율은 당초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정희 전 대표 21일 소환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아관 단일화 과정의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인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정희(43) 전 통합 진보당 대표를 21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측도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다행 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는지 또는 이를 사진에 보고 받아 알고 있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표의 측근들이 상당수 구속된 민족 이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군에 위치한 대불산업단지를 방문, 태풍 피해 현장을 살피고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한편, 주영순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식을 대신해 태풍 ‘불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목포·완도·나주 등 전남 6개 피해 지역을 방문해 농어민을 위로하는 한편 복구활동을 한데 이어 이날도 새누리당 전남도당 당직자들이 피해 복구 활동에 나서는 등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8일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의 배 과수농가를 방문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 현장을 들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재해보험 완비 농민부담 덜겠다”

황우여, 나주·목포 태풍피해 현장 방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8일 전남 지역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나주시 노안면과 세지면의 태풍피해 농가를 찾았던 후 방문해 세 번의 태풍으로 낙과와 침수 피해를 본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다. 배 낙과 피해를 본 농민의 이야기를 듣던 황 대표는 “태풍으로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해보험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점이 있다”며 “재해보험제도도 완비해 농

민들 부담을 줄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피해농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낙과 피해를 본 배 과수농가와 비닐하우스 붕괴 피해를 입은 멜론 농가를 각각 30여 분씩 방문한 황 대표는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 등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현장을 떠났다.

황 대표는 또 태풍 ‘불라벤’과 ‘덴

빈’ 피해 복구과정에서 순직한 목포 시청 공무원 고(故) 민준선 사무관의 민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이어 영암

군에 위치한 대불산업단지를 방문,

태풍 피해 현장을 살피고 중소기업인

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한편, 주영순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식을 대신해 태

풍 ‘불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목포·완도·나주 등 전남 6개 피해

지역을 방문해 농어민을 위로하는 한

편 복구활동을 한데 이어 이날도 새

누리당 전남도당 당직자들이 피해 복구

활동에 나서는 등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親朴좌장’ 홍사덕 새누리 자진 탈당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당 부담 안주겠다”

박근혜에 미칠 영향 최소화…野 “꼬리 자르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새누리당 홍사덕 전 의원이 18일 전격 자진 탈당했다.

친박근혜계의 대표적 인사인 홍 전 의원은 이날 친필로 작성, 서명한 자료를 통해 “큰일을 앞둔 당과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오늘 자진 탈당한다”며 “수사가 마무리되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또 “검찰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홍 전 의원의 자진 탈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홍 전 의원이 2007년과 2012년 연 거주 박근혜 경선캠프의 선거위원회를 지난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사

실 여부와 무관하게 박 후보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체로 관계자는

특히 최근 ‘인혁당 발언’ 논란을 계기로 후보 선출 직후 국민통합 행보로 끌어온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또다시 ‘검은 돈’ 의혹이 더럽혀져 박 후보의 대선 행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이날 홍 전 의원의 탈당 선택으로 일단 박 후보로서는 정치적 부담의 일정부분을 덜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이날 성남 가천대에서 열린 대학생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자진) 탈당을 하셨다는 (나름 대로) 판단을 해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며 “조속하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전 의원의 탈당으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쉽사리 사그라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검찰 수사라는 관문이 남아있다.

또 홍 전 의원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가 미루리되기 전까지 악권의 강력한 공세가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홍 전 의원의 출당론이 거론되자마자 홍 전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며 “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가 또다시 꼬리 자르기, 유체이탈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총선 시기 문제성·김형태 의원 탈당부터 현영희 의원과 현기자 전의원, 정준길 공보위원까지 꼬리 자르고 합의하고 도망가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총대통령 ‘내곡동특검법’ 심의 보류

법무부 재의 요구안 21일 국무회의 결정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자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오는 21일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자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내곡동 특검법 제의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권역분립의 원칙 위배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내세웠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일부터 대선후보 방송출연 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90일 전인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 까지 대선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에 따르면 방송사는 보도나 토론회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영상·음성 등을 통해 실

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보도·토론회 프로그램이라도 후보자를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금지되며 선거운동 기간(11월 27일 ~ 12월 19일)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표기한 공표한 자나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도 안된다.

/연합뉴스

신축 원룸매매(5억~20억까지)

조대, 전대, 쌍촌동, 수완구

• 수원동 수완구 2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쌍촌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조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전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수원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쌍촌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조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전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수원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쌍촌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조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전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수원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쌍촌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조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전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수원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쌍촌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조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전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수원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쌍촌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조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전대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수원동 3층 5억~9000만원(5억~9000만원)

• 쌍